



2022.12.31.

국회미래연구원 | 기획연구보고서 | 22-04호

#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 연구진

### 내부 연구진

박성준 부연구위원(연구책임)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발 | 간 | 사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국이 러시아에 대해 첨단기술 수출 제한, 금융제재,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등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도 시행되었지만, 이번 경제제재는 범위와 강도 면에서 기존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동결,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SWIFT 퇴출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국제질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래에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탐색하는 연구로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먼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러시아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경제적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제재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분석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는 대안적 국제금융시스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작성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성준 박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논의가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와 관련한 미래 이슈 탐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제1장 서론 .....	1
제2장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	7
제1절 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 .....	9
1.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영향 .....	9
2.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유럽연합 .....	14
제2절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	18
1. 국제질서에 대한 함의 .....	18
2.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 .....	20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	29
참고문헌 .....	33
Abstract .....	39

## 표 목 차

[표 2-1]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경과 .....	10
[표 2-2] 유럽연합의 러시아 경제제재 경과 .....	10
[표 2-3]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 .....	11
[표 2-4]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단위: %) .....	13
[표 2-5] 유럽연합 국가의 에너지 부문 러시아 의존도 .....	15

[그림 2-1] 루블화 환율 변화 .....	12
[그림 2-2] 주요 원자재 및 식량 가격 변동 .....	12



## 요 약

### □ 경제제재의 영향

#### ● 대(對)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대(對)러 경제제재를 시행하였는데, 첨단기술 수출 제한, 금융제재,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등을 담고 있음.
- 이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자산 동결,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SWIFT 퇴출 등이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강력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이용하여 유럽연합을 압박.

#### ● 경제제재의 영향

- 경제제재의 여파로 루블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었다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였음.
- 전쟁과 경제제재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주요 원자재와 식량 가격이 급등.
-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타격이 올 것으로 전망됨.

#### ●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 독일 등 유럽연합의 주요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며, 러시아는 경제제재 국면에서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
- 유럽연합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와 이에 따른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큼.

## □ 지정학적 함의

### ● 국제질서에 대한 함의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
- 다만, 아프리카, 중동 지역 일부 국가와 인도 등은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수차례 UN 결의안에서도 기권하였는데, 이들의 행보가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

-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SWIFT 배제를 계기로 미국의 영향력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적 국제결제시스템의 가능성이 제기됨
-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이 SWIFT에서 배제되었으나 인도, 중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루블화, 루피화, 위안화 등을 이용한 러시아와의 무역이 이루어짐
- 국제결제시스템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은 은행 간 송금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SWIFT와 은행 간 자금 이동과 청산이 이루어지는 달러 결제 시스템 CHIPS에 기반.
- 중국의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CIPS는 현재 미국 중심의 국제결제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지만, 1) 작은 규모, 2) SWIFT에 대한 의존성, 3) 위안화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적어도 단기간에는 현 시스템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제 1 장

서론

---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는 하나 이상의 국가가 특정 국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다.<sup>1)</sup> 무역, 금융, 투자 등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제한하여 대상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이를 통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국가 간 무력 충돌보다 정치적인 부담은 작지만,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는다. 경제제재로 인한 무역량의 감소는 확인되지만(Afesorgbor, 2019), 이러한 경제적인 타격이 요구 조건의 수용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하였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개시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번 침공을 계기로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하였다. 이번 경제제재는 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을 포함하는데,<sup>2)</sup> 그 범위와 강도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의 제재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동결,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sup>3)</sup> 배제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폭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 상반되는 분석 기사가 나왔으나, 서방의 기술집약적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러시아의 경제가 중장기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제재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y)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양측에서 모두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잇따른 경제제재 조치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항하여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매개로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 등의 품목의 러시

1) 강유덕(2017),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통합유럽 연구 제8권 2집, pp. 87-130.; 박성준·김은아·유재광(2020), 한중일 복합갈등: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호, 국회미래연구원.

2) 박정호 외(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SWIFT를 통하지 않는다면 국제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실제로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유럽 국가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이에 더하여 미국, 유럽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면서<sup>4)</sup> 사태는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으나 국제사회의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방 진영과 중국 간에도 갈등이 이어졌다.<sup>5)</sup> 다만,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것은 아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번 사태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역시 모호한 태도를 지속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간 체제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sup>6)</sup> 경제제재 이외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찰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러시아군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서, 러시아에 대한 반격에 사용할 선진 무기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미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기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ce Lend-Lease Act of 2022)을 통과시켰고,<sup>7)</sup> 미 정부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기들은 전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8)</sup>

유럽연합 역시 우크라이나의 패전으로 마무리되면 유럽 국가들이 받을 군사적 위협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 등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제제재로 인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러시아의 대(對)중국 의존도 또는 종속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범위를 좀 더 확장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결국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연장선

4) 이와 같은 전폭적인 지지에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계, 우크라이나의 선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요국 의회 연설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5) 서방 진영과 중국의 갈등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추이를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만에 대한 공세(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한몫하였다.

6) 엄구호(2022.05.27.),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전망. KIEP 러시아분과 대외경제전문가포럼 세미나 발제자료.

7) 동 법안은 2022년 4월 6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상하원 양원의 휴회가 끝난 뒤 4월 28일 하원을 통과하였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5월 9일은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인데, 상징적인 효과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선택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8) 대표적인 사례가 다연장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이다.

상에서 볼 수 있다.<sup>9)</sup>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sup>10)</sup> 먼저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 경제제재의 내용과 영향을 차례로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또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연장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지정학적 갈등의 함의를 분석한다. 특히, 강력한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무역(상호의존성)과 국제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탈세계화 가능성을 탐색해본다.<sup>11)</sup>

---

9)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중국 봉쇄정책에 있어 동맹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일종의 세력전 양상을 띄고 있다.

10) 본 보고서는 기획 연구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래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본 보고서의 일부는 아래의 보고서에 먼저 수록되었으며, 해당 보고서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표기하였다: 박성준(2022),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국제전략 Foresight 8호, 국회미래연구원.



## 제2장

###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

제1절 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

제2절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 제 1절

# 러시아 경제제재의 영향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영향

### 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대응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제재는 그 범위나 강도 측면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sup>12)</sup>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GDP를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국가였는데, 이러한 규모의 국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경제제재가 이루어진 것을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충분히 효과적일 경우 미국이 향후 중국을 상대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sup>13)</sup>

아래에서는 이후의 논의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로 각국이 발표한 주요 경제제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 등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러시아(또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립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러시아 경제제재의 경과를 정리하였다.<sup>14)</sup> 주로 첨단기술 수출 제한, 금융제재,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정리하였다.

12)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202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및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13) Rogoff, K.(2022.04.01.) Can the World Afford Russia-Style Sanctions on China?, Project Syndicate.

14)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첨단기술 제품, 민간경용(이중용도) 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박정호 외(2022), KOTRA·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202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표 2-1]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경과

일시	내용	비고
2월 22일	· 러시아 재무부, 중앙은행 등에 대해 국채거래 및 대출을 금지 · 44개의 러시아의 기업 금융기관을 SDN 목록(제재대상자 명단)에 추가	금융제재
2월 24일	러시아 주요 은행(스베르뱅크, VTB)을 포함하는 90여 개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동결, 신규차입·투자 금지 등의 제재	금융제재
2월 24일	FDPR을 적용하여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주요 분야 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무역제재
2월 26일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을 SWIFT에서 배제	금융제재
3월 8일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등에 대해 수입금지	무역제재
3월 11일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중단	무역제재
3월 24일	러시아 방산기업 및 러시아 하원의원 등에 대해 금융제재	금융제재

자료: 박정호 외(2022),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

[표 2-2] 유럽연합의 러시아 경제제재 경과

일시	내용	비고
2월 23일	유럽연합의 자본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 무역과 투자 제한	1차 제재
2월 25일	푸틴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금융제재 반도체와 민간겸용 제품(기술)의 수출 제한 러시아의 군사 및 보안 산업 관련 하이테크 수출 제한	2차 제재
2월 26일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을 SWIFT에서 배제	
2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러시아 항공기의 유럽연합 영공 통과 금지	3차 제재
3월 2일	SWIFT 망에서 배제될 7개의 러시아 금융 기관 지정	금융제재
3월 9일	3개의 벨라루스 금융기관을 금융제재(SWIFT 배제) 대상에 추가 항해장비 및 교신장비 수출 제한	
3월 11일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중단	무역제재
3월 15일	러시아 철강 수입 제한, 에너지 분야 신규 투자 제한	4차 제재
4월 8일	러시아 석탄, 목재, 시멘트, 비료 등의 수입 금지(2022년 8월~) 항공유, 쿼터 컴퓨팅, 반도체 등의 러시아 수출 금지	5차 제재
6월 3일	원유 등 석유제품의 단계적 수입 금지	6차 제재
10월 6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8차 제재

자료: 박정호 외(2022), 언론기사, 유럽연합 이사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

한편,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해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2-3]에 정리한 바와 같다. KOTRA(2022)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자국 시장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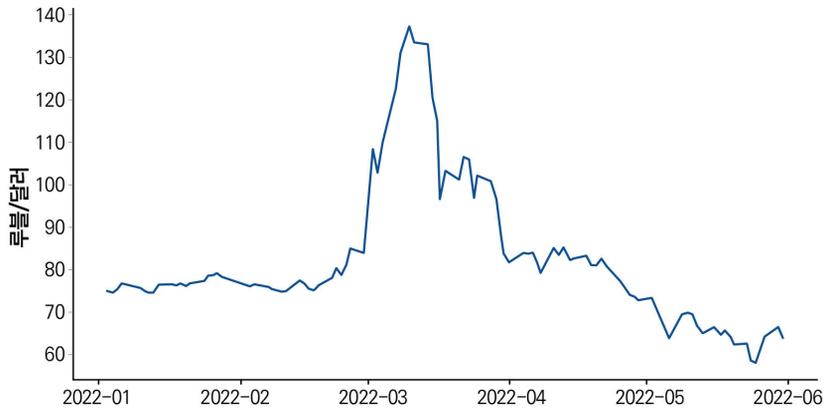
**[표 2-3]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

일시	내용	비고
2월 28일	자국 대외무역기업에 대해 22년 1월 1일 이후 외국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외화의 80% 매각 의무 부여	이후 유연화
	러시아 거주자가 외국인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80%를 3영업일 이내에 루블화로 환전하도록 강제.	
	러시아 거주자의 해외 금융기관 외화 송금 및 이체 금지	이후 기준 완화
3월 1일	비우호국가 관련 외국인에 대한 대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거래 및 관련 외국환 송금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시행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반출 금지	
3월 5일	비우호국가 채권자에 대한 외화 표기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	
3월 6일	비우호국가의 특허 무력화(발명,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등)	
3월 8일	비우호국가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이며 러시아 내 활동을 중단한 기업에 대한 국유화 추진 발표	
3월 23일	4월 1일부터 비우호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에 대해 루블화 결제만을 허용	가즈프롬뱅크를 통한 결제는 예외

자료: 법무법인(유) 세종(2022.03.17.), Kotra(2022) 등을 토대로 정리

## 나. 경제제재의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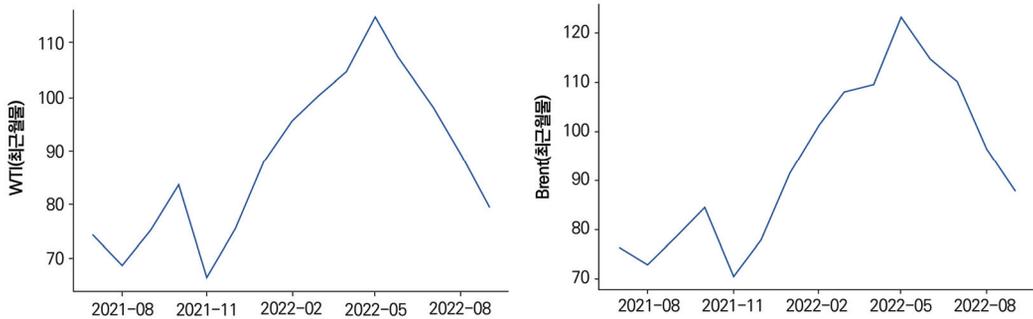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자산의 동결,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SWIFT 퇴출 등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이루어진 강력한 금융제재의 영향은 루블화의 평가절하로 이어졌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9.5%에서 20%로 두 배 가량 인상하고,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등 자본 통제를 시행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이후 루블화 환율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격의 상승도 이러한 회복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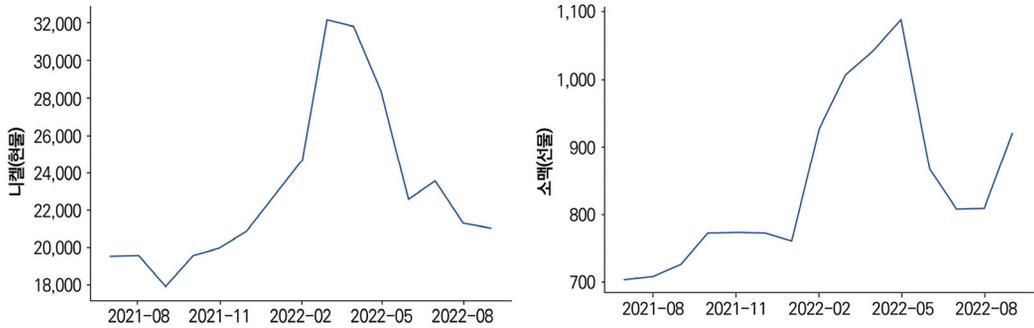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그림 2-1] 루블화 환율 변화

한편, 전쟁과 경제제재의 여파로 주요 원자재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주요 품목별 가격 변동은 아래의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원유 가격<sup>15)</sup> 및 니켈, 소맥 가격이 전쟁 발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월 이후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품목은 러시아가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원유와 니켈은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약 11%이고, 소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출 비중의 합이 약 29%에 달한다. 전쟁과 제재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이들 품목의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가격이 급변한 것으로 파악된다.



15) 러시아산 원유는 우랄유이다.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그림 2-2] 주요 원자재 및 식량 가격 변동

이와 같은 원자재 및 식량 가격의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타격이 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년 4월 19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대부분 국가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2년 1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하였다. 특히,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하향 조정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률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주요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아래의 [표 2-4]에 정리한 바와 같다.

[표 2-4]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단위: %)

	22.1	22.4	조정폭		22.1	22.4	조정폭
세계	4.4	3.6	-0.8	일본	3.3	2.4	-0.9
선진국	3.9	3.3	-0.6	캐나다	4.1	3.9	-0.2
미국	4.0	3.7	-0.3	한국	3.0	2.5	-0.5
유로존	3.9	2.8	-1.1	신흥개도국	4.8	3.8	-1.0
독일	3.8	2.1	-1.7	중국	4.8	4.4	-0.4
프랑스	3.5	2.9	-0.6	인도	9.0	8.2	-0.8
영국	4.7	3.7	-1.0	러시아	2.8	-8.5	-11.3

자료: IMF(20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4.19.)

## 2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유럽연합

한편, 경제제재의 효과는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와 표적이 되는 국가의 경제적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가치사슬로 각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국가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타격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가 제재를 받는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면 경제적 피해는 표적이 되는 국가에 집중될 것이다. 반면,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가 제재를 받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면 제재 대상 국가 역시 제재 시행 국가에 이를 이용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제재를 시행한 국가에 큰 피해를 주어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쌓이는 불만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집권 세력에 정치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주도한 미국과 유럽연합 가운데 미국은 전자에 해당하고 유럽연합은 후자에 해당한다. 미국 역시 러시아와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러시아가 미국의 무역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박정호 외(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대(對)러 수출이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6%에 불과하며, 대(對)러 수입이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5%에 그친다.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 비중은 10% 미만으로(박정호 외, 2022) 낮은 편이다.

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27개국의 천연가스 수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38.2%, 원유 수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7%에 달한다.<sup>16)17)</sup> 이 가운데 유럽연합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독일은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6.1%, 34.0%로 매우 높다. 또한,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16) 아래의 내용은 다음의 두 출처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European Commission, EU energy mix and import dependency([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imports\\_from\\_Russia\\_-\\_statistics&oldid=556977#EU\\_energy\\_dependency\\_on\\_Russia](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imports_from_Russia_-_statistics&oldid=556977#EU_energy_dependency_on_Russia)); European Commission, Energy production and imports([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production\\_and\\_imports#Production\\_of\\_primary\\_energy\\_decreased\\_between\\_2010\\_and\\_2020](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production_and_imports#Production_of_primary_energy_decreased_between_2010_and_2020))

17) 아래의 내용은 항목별로 전체 수입 중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였음. 유럽연합의 자료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제시하므로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유럽연합 국가 중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체코(100%), 라트비아(100%), 슬로바키아(85.4%), 불가리아(75.2%), 핀란드(67.4%), 폴란드(54.8%) 등이 있다. 또한, 석유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100%), 핀란드(84.0%), 폴란드(72.0%), 체코(48.8%) 등이 있다.

[표 2-5] 유럽연합 국가의 에너지 부문 러시아 의존도

국가	천연가스	원유
체코	100.0 %	48.8 %
라트비아	100.0 %	-
헝가리	95.0 %	61.0 %
슬로바키아	85.4 %	100.0 %
불가리아	75.2 %	0.0 %
핀란드	67.4 %	84.0 %
독일	66.1 %	34.0 %
폴란드	54.8 %	72.0 %
에스토니아	46.0 %	-
루마니아	44.8 %	32.3 %
이탈리아	43.3 %	11.1 %
리투아니아	41.8 %	72.6 %
그리스	38.4 %	17.7 %
룩셈부르크	27.2 %	-
네덜란드	26.3 %	26.5 %
유럽연합 27개국	38.2%	25.7%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 energy mix and import dependency([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imports\\_from\\_Russia\\_-\\_statistics&oldid=556977#EU\\_energy\\_dependency\\_on\\_Russia](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imports_from_Russia_-_statistics&oldid=556977#EU_energy_dependency_on_Russia))

- 주: 1) 천연가스의 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음.  
 2) 헝가리, 리투아니아 자료는 천연가스 단순 수송(natural gas transit)의 비중이 자국 내 소비에 비해 상당히 높음.

러시아는 이를 이용하여 유럽연합을 압박하였고,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 러시아 경제제재에 있어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유럽연합은 에너지 부문의 제재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

한 차이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의 차이에 기인한다.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로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연합 국가의 상당수와 영국 등이 에너지 대란을 경험하고 있다. 더군다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판매대금이 전쟁 재원으로 사용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위의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별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러 제재 등에 있어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심성은, 2022).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에너지 대란과 관련하여 메르켈 전 총리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인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sup>18)</sup>. 메르켈 전 총리는 전임 슈뢰더 총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주도하였으며,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였다. 메르켈 전 총리의 이러한 친러 정책이 과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서유럽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건설을 주도하였으며, 퇴임 후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회사인 가스프롬(Gazprom)의 주주 위원장이 되어 막대한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sup>19)</sup> 가스프롬은 러시아의 반(半)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회사이다. 가스프롬은 오랫동안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졌다.

다만, 유럽연합 역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중단<sup>20)</sup>)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 등의 대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어 귀추가 주

18) 독일과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관련 협력은 냉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러시아(구 소련)는 독일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라는 유인이 있었고, 독일은 러시아의 이러한 유인 때문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독일 내에서도 적어도 초기에는 상호의존성(자원)의 무기화와 관련한 고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변화하면서 양국의 관계와 유인 또한 변화하였는데도 독일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매일경제(2022.09.08.)를 참고.

19) YTN(2022.09.13.) '우크라 전쟁' 독일 책임론 부각...앙겔라 메르켈 "난 책임 없어". [https://www.ytn.co.kr/\\_ln/0104\\_202209130152157510](https://www.ytn.co.kr/_ln/0104_202209130152157510)

2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3월 8일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2030년 이전에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2.03.08.)

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5월 18일 최종 발표한 「REPowerEU」 계획이 이러한 정책 전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2.05.18.). 동 계획에서는 에너지 소비 절감, 운송 분야 탈탄소화 등도 추진하며, 총 2,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된다.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 간 액화 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이 논의되고 있으며<sup>21)</sup>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LNG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sup>22)</sup>

하지만 천연가스는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서 단기적으로 공급망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전기저널, 2022.09.07.). 유럽연합의 LNG 수입 터미널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시설의 건설에는 수년이 소요된다(연합뉴스, 2022.04.29.). 또한, 유럽연합이 충분한 LNG 물량을 도입하려면 전 세계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 또한 수년이 소요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09.19.).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의 가스 공급이 2025년까지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09.19.).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와 이에 따른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 연합뉴스(2022.04.29.) 미국·EU, 천연가스 수십년 장기 공급계약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9079300009>

22) 에너지경제연구원(2022.09.19.), 유럽 가스 공급위기 상황 2025년까지 계속될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2-18호.

## 제2절

#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국제질서에 대한 함의

제1장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과 더불어 대표적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경계, 개전 초기의 예상을 뒤엎은 우크라이나의 선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요국 의회 연설과 지원 호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패전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된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에 적극적인 것도 이러한 상황 인식과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진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초기에는 표면적으로나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으나 개전 초기부터 이어진 국제사회의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는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판매처를 잃은 러시아의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8월에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유는 28%, 액화천연가스는 37%, 석탄은 57% 증가하였으며, 액화천연가스 일부는 유럽에 재판매하였다.<sup>23)</sup> 또한,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함께 서방의 금융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적 국제결제시스템 창설을 제안하였다. 특히,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23) 한국무역협회(2022.09.21.), 중국, 러시아산 LNG 사서 유럽에 재판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nIndex=1&sSiteid=1&nIndex=%2070623>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로 인한 국제 관계의 변화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사안을 모두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만 해석하면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소극적이거나 UN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sup>24)</sup>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이다.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4자 안보 대화, 이른바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에 속한 국가이지만, 동시에 러시아를 규탄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4차례에 걸친 UN 총회 결의안에 모두 기권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인도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자리한다. 인도는 무기의 2/3를 러시아로부터 조달하고 있다.<sup>25)</sup> 또한, 오랜 기간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러시아가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러시아가 무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줄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인도가 이미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아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여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로 인해 저렴해진 러시아의 원유가 매력적인 대안이 된다. 다만, 인도가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거 냉전 시기부터 이른바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였다는 점 역시 인도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참고해야 한다.

한편 4차례의 UN 결의안에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권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아프리카 국가는 러시아를 과거 독립운동(anti-colonial struggle)을 지원해준 구소련의 후계자로 보아서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2000

24) 아래의 내용은 주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conomist(2022.05.07.), Tanvi Madan explains why India is not in Russia's camp.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2/05/07/tanvi-madan-explains-why-india-is-not-in-russias-camp>; Stent(2022.05.02.), The West vs. the Rest,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2/05/02/ukraine-russia-war-un-vote-condemn-global-response/>; 김동석(2022), 최근 러시아의 대(對)아프리카 진출 고찰,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2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5) 이와 관련해서는 인도 내에서도 미국의 무기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으며, 미국 역시 인도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

년대부터 러시아가 꾸준히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군사와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UN 결의안에서의 기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김동석(2022)이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에 호의적인 정치 지도자들과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국민 간 괴리가 향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 국가들 역시 상당수가 UN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반대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에 대한 불신,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7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간 회담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인권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회담 추진 당시에도 이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회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회담 이후에도 이렇다 할 증산은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의 관점에서 회담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sup>26)</sup>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맥락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이 강화되는 가운데, 둘 중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관망하는 국가들이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경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에서 이들 지역과 비교하여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세력이 매우 강하지만, 아프리카의 성장 가능성과 자원 매장량, 중동의 원유 생산량<sup>27)</sup> 등을 고려할 때 양 진영 모두 이들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 2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

러시아 경제제재 국면에서 초기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자산 동결과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SWIFT 배제이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를 국제

26) 서울경제(2022.12.11.), 빈 살만, 바이든 뺨 때리고 시진핑과 '밀착'... 이참에 中 군대도 들일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UZXX1MS>

27)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러한 전환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유 등 화석연료의 중요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SWIFT 망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국제 결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무역의 축소와 해외자산 접근 차단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하다.<sup>28)</sup> 이러한 강경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미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경제제재에서 주목받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은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에게는 현재의 시스템을 벗어나 대안적인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을 제공한다. 현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강력한 금융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SWIFT를 이용한 경제제재가 장기화될수록, 빈번해질수록 별도의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 현 시스템을 대체할 대안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대안적인 시스템의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지난 6월 BRICS 정상회의에서 SWIFT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sup>29)</sup>

아래에서는 먼저 이번 경제제재 국면에서 나타나는 루블화 결제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본 뒤, 중국의 위안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 가. 러시아 금융기관의 SWIFT 퇴출과 루블화 결제 거래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이 SWIFT에서 배제된 이후 러시아는 교역국과 루블화를 이용한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루피-루블 결제와 위안-루블 결제이다.

먼저, 루피-루블 결제 방안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행된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배경에는 경제제재를 계기로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원유의

28) 경제제재에서 SWIFT망 차단이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있다.

29)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22.06.30.), BRICS의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구축 제안과 향후 전망; 한국무역협회(2022.06.24.), 중·러의 반격... 브릭스 확대·새 국제결제시스템 제안.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4083&logGb=A9400\\_20220627](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4083&logGb=A9400_20220627)

구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너지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조달하고자 하는 인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이다. 또한,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지위도 한몫하였다. 인도는 냉전 시기에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였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중에도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거대한 경제 규모와 성장 가능성, 미국의 중국 견제에서의 인도의 중요성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인도는 전통적으로 국방 분야에서 러시아(구 소련)와 협력했으며, 무기 체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인도 간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7월 수출입을 루피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표하였다.<sup>30)</sup> 동 시스템은 인도의 무역을 증진하고 루피화의 국제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등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받는 국가들과의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동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상업은행에 러시아 등 상대국 은행이 선방계정(Vostro account)을 개설하여야 한다. 인도의 수출입업자 모두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교역에서의 이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러시아와 거래하였을 때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제제재의 위협으로 인해 규모가 큰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의 거래에 있어 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1)</sup> 러시아의 금융기관들은 동 시스템을 이용해 러시아와 교역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인도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제재의 위협 외에도 러시아 루블화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루피화와 루블화 간 적정 환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 역시 규모가 큰 금융기관들이 주저하는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9월 러시아의 천연가스 판매대금을 루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계약하였다.<sup>32)</sup> 동 계약은 4천억 달러(475조2천억원) 규모의 매우 큰 계약

30) Reuters(2022.07.13.), Factbox: India's move on rupee settlements may help trade with Russia. <https://www.reuters.com/markets/us/indias-move-rupee-settlements-may-help-trade-with-russia-2022-07-13/>

31) Reuters(2022.10.10.) Large Indian lenders shun rupee mechanism in Russia trade-sources. <https://www.reuters.com/markets/large-indian-lenders-shun-rupee-mechanism-russia-trade-sources-2022-10-10/>

이다. 두 국가 모두 자국의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고, 달러화나 SWIFT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경제제재로 인해 SWIFT 망에서 배제된 러시아와 현시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중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제 형태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역시 불확실성이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한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를 계기로 독자적인 루블화 결제시스템 미르(MIR)를 출범한 바 있다(한국은행, 2022.06.30.). 지난 6월 BRICS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는 회원국 간 미르 결제시스템을 활용한 결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미르 시스템이 러시아 내 소액결제망으로 출범하였다는 점, 그리고 장기화된 전쟁과 서방의 경제제재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동 시스템이 BRICS 국가 간 주요 국제결제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 나. 위안화를 이용한 국제결제시스템

향후 SWIFT 망을 사용하지 않는 국제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된다면 가장 유력한 결제 통화는 중국의 위안화일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이하 CIPS)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중국 은행들의 CIPS 접속이 급증한 바 있다.<sup>34)</sup>

위안화를 이용한 대안적인 국제결제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은 러시아 경제제재 이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15년에는 CIPS를 발족하였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개발 및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자국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연계 가능성을 시험하는 m-CBDC<sup>35)</sup> 프로젝트에 참여

32) 한국무역협회(2022.09.07.), 러·중, 가스대금 달러 대신 루블·위안화로 결제.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iteid=1&nIndex=%2070417>

33) 미르 결제시스템이 운영중인 지역은 2021년 10월 기준으로 구소련 국가들,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이다.

34) 한국무역협회(2022.03.04.), 중국 은행들, 러 제재 이후 CIPS(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 접속 급증.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363&siteid=2>

35) Multipl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m-CBDC) Bridge Project.

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표준 설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up>36)</sup>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는 SWIFT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SWIFT 망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결제망의 구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CIPS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먼저 SWIFT 망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 국제결제시스템을 살펴본 후 CIPS의 국제결제시스템 대체 가능성을 논의한다. 아래의 내용은 주로 Eichengreen(2022)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sup>37)</sup>

## 1) SWIFT, CHIPS

러시아 금융제재가 SWIFT 퇴출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SWIFT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 국제결제시스템은 SWIFT뿐만 아니라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와 미 달러화의 지위에 모두 의존한다. SWIFT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은행 간 송금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계라면, CHIPS는 실제로 은행 간 자금이 이동하고 청산되는 달러 결제시스템이다.<sup>38)</sup> 그리고, 달러화는 은행 간 거래(송금)에 사용되는 통화이다. 이는 Eichengreen(2022)이 대안적인 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시한 세 가지 요소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SWIFT는 서로 다른 국가의 은행 간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벨기에에 본사가 있다. SWIFT 망에 참여하는 기관은 11,000개 이상이며, 기관의 국적 또한 200개 이상이다. SWIFT 시스템은 메시지의 코드와 양식을 표준화하여 메시지의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며, 거래 상대방 은행의 식별과 관련한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각 은행은 SWIFT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라 고객 계정의 잔액을 조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행 간 거래(송금)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거래는 미 달러화에 국한되지 않으며, 달러와 외에도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등이 거래 및 송금에 사용된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달러화는

36) 관련 논의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 박성준(2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국가미래전략 Insight 29호, 국회미래연구원.

37) Eichengreen(2022) 외에 Fishman(2022), Jin(2022), Duffie & Economy(2022) 등도 참고하였다.

38) CIPS은 CHIPS에 대응된다.

총 거래 금액의 42.31%, 유로화는 35.15%, 파운드화는 6.54%, 엔화는 2.88%, 위안화는 2.44%를 차지한다.

CHIPS는 연방준비제도의 감독을 받는 미국의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이다.<sup>39)</sup> CHIPS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직접 참여기관과 간접 참여기관으로 구분된다. 직접 참여기관의 수는 약 50개인데, 미국의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지사(branch)로 구성된다. 해외 금융기관 중 4개는 중국의 은행이다. 거래의 청산은 직접 참여기관만 가능하므로, 직접 참여기관은 자신의 거래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간접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른 거래도 진행한다.

CHIPS는 차액결제시스템의 형태로 운영된다. 은행 간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지급이 일어나지 않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은행 간 이루어진 거래의 차익만을 계산하여 지급한다.<sup>40)</sup>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결제유동성 절약기능(liquidity saving mechanism, LSM)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지급 결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거래의 차익만을 계산하므로 은행 간 거래에 있어서 실시간 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은행 간 거래에 지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Martin and McAndrews, 2008).<sup>41)</sup>

CHIPS의 결제는 미 달러화를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시스템에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의 미국 지점도 참여하므로 국제결제가 가능하다. CHIPS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미국의 은행 A가 CHIP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해외 은행 D로 송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자금이 이동한다:<sup>42)</sup> 1) 먼저 은행 A는 CHIPS에 직접 참여하는 미국 은행 B로 자금을 이체한다. 2) 은행 B는 CHIPS에 직접 참여하는 해외 은행 지점 C로 송금한다. 3) 해외 은행 지점 C는 해외 은행 D로 송금한다.

39) 다른 국가에도 이에 대응되는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이 있다.

40) 2000년까지는 영업시간 종료 후 거래의 차익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알고리즘에 따라 영업일 도중에 차액의 지급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영업시간 종료 후 아직 청산되지 않은 거래의 차익이 지급된다.

41) 반면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은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42) Eichengreen(2022)의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 2) SWIFT, CHIPS와 미국의 금융제재

SWIFT와 CHIPS는 현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과 동시에 미국의 금융제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아래에서는 각 시스템이 미국의 금융제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특정 국가의 금융기관이 SWIFT 망에서 배제하려면 주주(shareholder)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SWIFT의 주주는 많은 국가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국 금융기관의 표결권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이외의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의도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차 제재(secondary san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미국 정부가 자국의 금융기관이 SWIFT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가능성(위협)도 있다.

미국 정부는 SWIFT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SWIFT 데이터를 통해 제3자가 경제제재를 준수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SWIFT는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니고 본사가 벨기에에 있으므로 미국 정부가 SWIFT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데이터 공유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미국 의회는 이 과정에서 SWIFT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CHIPS는 미국 정부의 관할권에 있으므로 CHIPS를 통한 금융제재는 SWIFT를 통한 금융제재보다 더 간단하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CHIPS 시스템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미국, 영국, 유로 지역 등 주요 국가(지역)의 CHIPS와 유사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예시로 든 미국 정부의 조치는 자국의 금융기관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지급과 결제에 있어서 미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는 이러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 3) CIPS의 국제결제시스템 대체 가능성

CIPS는 CHIPS에 대응되는 중국의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이다. CHIP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 中國人民銀行)의 감독을 받고, CIPS에 참여하는 기관은 직

접 참여기관과 간접 참여기관으로 나뉜다. 77개의 직접 참여기관<sup>43)</sup>은 중국 은행의 해외지점(overseas branches)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sup>44)</sup> 간접 참여기관은 총 1,276개의 기관이며, 대륙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 975개 기관(중국 본토 552개 기관 포함), 유럽에 185개 기관, 아프리카 지역에 47개 기관, 북아메리카 지역에 29개 기관, 오세아니아 지역에 23개 기관, 남아메리카 지역에 17개 기관이 있다. 국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107개국의 기관이 CIPS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CIPS는 CHIPS와는 달리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을 따른다.

현재로서는 CIPS가 미국 중심의 국제결제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Eichengreen, 2022; Fishman, 2022; Jin, 2022). 이를 뒷받침해주는 논거는 CIPS의 규모, SWIFT에 대한 의존성,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 등이다.

첫째, CIPS의 규모는 CHIPS의 규모보다 매우 작다. 약 11,000개의 기관이 CHIPS에 참여하는 반면, CIPS에 참여하는 기관은 약 1,350개에 그친다. 두 시스템에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산 결제 규모를 살펴보면 CHIPS는 약 1조 8천억 달러이지만 CIPS는 약 630억 달러(2022년 10월 기준)에 불과하다.<sup>45)</sup> CIPS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CHIPS에 비하면 매우 작다.

둘째, CIPS는 SWIFT에 의존한다. CIPS 참여기관 간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CIPS의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SWIFT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직접 참여기관은 두 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간접 참여기관은 SWIFT 시스템을 이용하며, CIPS 결제의 약 80%는 SWIFT를 이용한 결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IPS와 SWIFT의 관계는 최근 오히려 긴밀해지고 있다(Eichengreen, 2022; Fishman, 2022). 한 예로 SWIFT는 2019년 베이징에 지부(unit)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중국어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다.<sup>46)</sup>

셋째,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위안화를 통해 국제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결제통화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결

43) CIPS 홈페이지에 제시된 수치이며, 2022년 10월 기준이다. 아래의 간접 참여기관의 수 역시 2022년 10월 기준이다. 직접 참여기관 리스트는 CIPS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44) 한국은행(2022.02.28.)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CIPS 직접 참여기관은 교통은행 서울지점과 중국은행 서울지점이다. 이 가운데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

45) CHIPS와 CIPS 홈페이지 참고.

46) 이를 통해 중국의 자국 내 결제시스템과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확보하였다.

제통화로서의 위안화는 미 달러화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는 제도적인 요인과 관련이 크다(Gopinath, 2020.01.07.; Prasad, 2020.08.25.).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에 의한 자본 통제(capital control)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위안화의 결제통화로서의 가치는 한계가 있다. 이는 CIPS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안화의 국제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한편, 중국이 지금까지 SWIFT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적인 이유와는 관계가 없으며(Eichengreen, 2022; Fishman, 2022; Duffie & Economy, 2022),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이 있다. SWIFT와 같은 시스템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즉, 아무리 훌륭한 은행 간 메시지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유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SWIFT를 대체할 훌륭한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자국 금융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손쉬운 대안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금융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해당 시스템은 유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언제나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단기적으로 중국이 SWIFT, 나아가 현 국제결제시스템을 대체할 대안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제3장

##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서방국가의 러시아 경제제재 움직임과 그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이와 같은 경제제재가 가지는 중장기적인 지정학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이 나타나고, 지정학적으로는 미국·유럽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양상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인도와 아프리카 주요국 등 상당수의 국가가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국의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에도 주목하였다.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상호의존성의 비대칭성에 기반한 강압적인 외교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태에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 러시아 양측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결제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자원 부국이라는 점과 유럽 국가들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중장기적인 경제적 타격에 노출되었고,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부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추진해오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경제제재가 전반적으로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로는 상당히 강력하다는 점,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러시아를 매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블록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는 국제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번 경제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 동결,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SWIFT 퇴출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제재가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금융제재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과 대안적 국제결제시스템 구축 노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회피할 유인이 있는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된 국제결제시스템에 참여할 동기가 있고,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의 측면에서 위안화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비록,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국제결제시스템의 굳건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위안화의 위상이 크게 상승한다면 국제금융시스템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러시아 경제제재는 우리나라에도 전략적인 고민을 안겨준다. 향후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거나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이 심화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진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치와 경제 체제 모두에서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 포함되며, GDP 규모를 기준으로 10번째에 해당하는 선진국이므로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 대한 균형을 잡는 외교전략을 구사하였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도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이에 따른 진영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강화와 국제전략 기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진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영 간 대립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관철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 참고문헌

---

1. 문헌자료
2. 웹사이트



##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1 문헌자료

- 김동석(2022), 최근 러시아의 대(對)아프리카 진출 고찰,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2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강유덕(2017),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이후 EU-러시아 무역관계의 변화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제8권 2집, pp. 87-130.
- 박성준·김은아·유재광(2020), 한중일 복합갈등: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준(2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국가미래전략 Insight 29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준(2022),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국제전략 Foresight 8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정호 외(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심성은(2022).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 -유럽-러시아의 천연가스 갈등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2010호. 국회입법조사처.
- 엄구호(2022.05.27.),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전망. KIEP 러시아분과 대외경제전문가플 세미나 발제자료
- 한국은행(2022.02.28.). 러시아의 SWIFT 퇴출 이후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대체 이용가능성에 대한 견해. 한국은행 상해주재원.
- 한국은행(2022.03.0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및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한국은행(2022.06.30.), BRICS의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구축 제안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Afesorgbor, S. K.(2019),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How do threatened sanctions compare with imposed sanc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6, pp. 11-26.

Duffie, D. & Economy, E.(2022), *Digital Currencies, The US, China, and the World at a Crossroads*, Hoover Institution.

Eichengreen, B.(2022), *Sanctions, SWIFT, and China'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The Marshall Paper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y 2022.

Fishman, E.(2022), *Challenges from Chinese Policy in 2022: Zero-COVID, Ukraine, and Pacific Diplomacy*, Panel II: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Implications for Integrated Deterrence,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ugust 3, 2022.

Gopinath, G.(2020.01.07). *Digital currencies will not displace the dominant dollar*. Financial Times.

Jin, E.(2022), *Under the Radar: Alternative Payment Systems and the National Security Impacts of Their Growth*, TESTIMONY BEFORE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MONETARY POLICY. September 20, 2022.

KOTRA(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제재*. Global Market Report 22-007.

KOTRA·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2022).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

Prasad, E.(2020.08.25.). *China's Digital Currency Will Rise but Not Rule*. Project Syndicate.

Rogoff, K.(2022.04.01.) *Can the World Afford Russia-Style Sanctions on China?*, Project Syndicate.

Stent, A.(2022.05.02.), The West vs. the Rest,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2/05/02/ukraine-russia-war-un-vote-condemn-global-response/>

## 2 웹사이트

매일경제(2022.09.08.). [Industry Review] 獨 천연가스 대란의 교훈...중국산 원자재 의존도 낮춰라. <https://www.mk.co.kr/news/business/10449520>

법무법인(유) 세종(2022.03.17.),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제재 조치.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759?page=0&code=&keyword=%EB%9F%AC%EC%8B%9C%EC%95%84>

서울경제(2022.12.11.), 빈 살만, 바이든 뺨 때리고 시진핑과 ‘밀착’... 이참에 中 군대도 들일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UZXX1MS>

연합뉴스(2022.04.29.) 미국·EU, 천연가스 수십년 장기 공급계약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9079300009>

전기저널(2022.09.07.), EU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전략과 시사점.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

한국무역협회(2022.03.04.), 중국 은행들, 러 제재 이후 CIPS(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 접속 급증.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363&sSiteid=2>

한국무역협회(2022.06.24.), 중·러의 반격... 브릭스 확대·새 국제결제시스템 제안.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4083&logGb=A9400\\_20220627](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4083&logGb=A9400_20220627)

한국무역협회(2022.09.07.), 러·중, 가스대금 달러 대신 루블·위안화로 결제.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0417>

Economist(2022.05.07.), Tanvi Madan explains why India is not in Russia's camp.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2/05/07/tanvi-madan-explains-why-india-is-not-in-russias-camp>

European Commission, EU energy mix and import dependency.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imports\\_from\\_Russia\\_-\\_statistics&oldid=556977#EU\\_energy\\_dependency\\_on\\_Russia](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imports_from_Russia_-_statistics&oldid=556977#EU_energy_dependency_on_Russia)

European Commission, Energy production and import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production\\_and\\_imports#Production\\_of\\_primary\\_energy\\_decreased\\_between\\_2010\\_and\\_2020](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nergy_production_and_imports#Production_of_primary_energy_decreased_between_2010_and_2020)

European Commission(2022.03.08.),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511)

European Commission(2022.05.18.), REPowerEU: A plan to rapidly reduce dependence on Russian fossil fuels and fast forward the green transit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131](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131)

Reuters(2022.07.13.), Factbox: India's move on rupee settlements may help trade with Russia. <https://www.reuters.com/markets/us/indias-move-rupee-settlements-may-help-trade-with-russia-2022-07-13/>

Reuters(2022.10.10.) Large Indian lenders shun rupee mechanism in Russia trade-sources. <https://www.reuters.com/markets/large-indian-lenders-shun-rupee-mechanism-russia-trade-sources-2022-10-10/>

# Abstract

---



##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presented by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has imposed stringent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in response to it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These sanctions include a comprehensive ban on high-tech exports, exclusion of Russian banks from the SWIFT network, and prohibition of access to foreign exchange reserves held abroad by the Russian central bank. Additionally, imports of Russian oil have been suspended. The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the resultant sanctions are expected to have profound geo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global arena.

The current examination aims to examine the complex economic and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anctions levied against Russia. The study begins by offering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sanctions, including a thorough analysis of their consequences. This is followed by an in-depth exploration of the concept of weaponized interdependence, with a focus on its relationship to the ongoing energy crisis in Europe.

Subsequently,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anctions are analyz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intricate relationships between nations in the context of the Russia-Ukraine conflict and the resulting sanctions. The study also examines the global financial system, with a focus o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act on the existing system, as well as the potential offered by the alternative financial system proposed by China.



##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6948-9650)

---

©2022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82065-8-9 (95340)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